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복지국가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중산층 재건
신산업전략을 통한 경제생태계 전환 및 경제체질 개선
일자리 복지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 및 일과 복지의 선순환

2015. 3. 30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복지국가를

포용적 성장이란?

-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와 그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성장
 - 포용적 성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시스템 요구
 - 사회안정과 성장의 기본인 중산층을 키우고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강화

① 소득주도성장 (Income-Led Growth)

-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 현금급여형 사회안전망 구축
- 중산층 감소를 방지하여 내수활성화 / 사회계층간 갈등 / 사회조정비용 급증을 방지
- 임금개선과 소득증대를 통한 **성장과 복지 그리고 고용이 선순환하는 모델** 구축

② 신산업전략 (New Industry Strategy)

-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두려움 없이 창업 등에 도전하는 기회를 보장하여 달성 가능
- 혁신주도 성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
- 경제 생태계를 창업기업이 **창업-벤처-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활한 시스템

③ 일자리 복지

- 조세정의와 형평을 고려한 과세를 통하여 복지재원 마련
- 급식과 보육은 양질의 보편복지를 발전시키면서 다른 분야는 선별적 복지와 결합
- 여성일자리 , 평생교육, 고용보험강화, 노인일자리, 사회적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확대**

중산층 만들기, 지키기, 키우기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에 대한 욕구를 외면하는 것은 유능한 진보가 아니다.
나눔, 배려, 연대 뿐만 아니라 성공과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 ‘중산층 만들기’는 **오늘의 서민을 내일의 중산층**으로

계층이동을 시키면서 ‘추락한’ 중산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일어서게 함

□ ‘중산층 지키기’는 오늘의 중산층이 내일의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유지하도록 담보

□ ‘중산층 키우기’는 오늘의 중산층이 내일의 상층으로 계층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대한민국이 성공한 국가가 되도록 중산층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나라’

“좋은 아이디어를 우선시하고 협소한 당파성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 정신을 우선시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물려받을 나라에 무엇이 좋은가?’를
우선적으로 묻는 이유이다.”

- 버락 오바마 -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3개의 기둥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복지 국가를

소득주도성장

- ① 시간제 비정규직 임금가산제
- ②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확산
- ③ 한계기업 및 한계자영업자 지원 강화
- ④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
- ⑤ 가계지출비용 감소

경제생태계를 바꾸는 신산업전략

- ① 창업국가
창업보험 도입 / 연대보증 폐지 등
- ② 미래 성장산업 육성
MESIA / SWEET
- ③ 경쟁촉진
독과점 구조 해체
- ④ 해외직판
중소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
- ⑤ 공유경제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일자리 복지

- ① 조세정의 실현
법인세 등 원상 회복 / 탈세방지
- ② 중산층 지원을 위한 증세
최상위계층 금융소득/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중산층 지원
- ③ 복지재원 마련
중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
/ 사회복지세 도입
(단, 국민적 타협을 전제로)
- ④ 일자리 창출
양질의 보편복지 향상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확대

소득주도성장

I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시간제 임금가산제

II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확산

III 한계기업 및 한계자영업자 지원 강화

IV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

V 가게 지출 비용 감소

소득주도 성장과 임금인상 방안 -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 시간제 비정규직 임금가산제 도입

(상시 · 지속업무, 생명과 안전업무 등에
대해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남용 방지
- 가계소득 제고를 통해 중산층 확대 및 경제적 행복지수 개선
-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소득주도 성장과 임금인상 방안 - 비정규직

I.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가산제

□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임금 불평등 해소가 필수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임금 뿐만 아니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의 격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용안정성 격차 또한 지속

○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상승률로 '임금없는 성장' 현상 나타남

- 노동소득 분배율도 지속적으로 하락: 노동에 대한 보상(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기업의 몫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늘어나

○ OECD·WB·ILO 등 국제기구도 '소득주도 성장론' 제기하면서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가계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제기

-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 일본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 독려, 중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최저임금을 인상

□ '시간제 비정규직 임금 가산제'(정규직보다 20% 상향된 임금) 도입

○ '비정규직 임금 가산제'를 도입하여 잦은 고용불안을 인내하는 대신 고(高)임금으로 보상받는 방안을 검토 요구

- 고용불안과 사회보장 혜택이 떨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의 지급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형평성 회복과 비정규직 오·남용 방지

- 네덜란드 시간제임금 모델을 도입하여 임금격차 해소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비례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례보호원칙 이상의 장치로써 시급 임금인상을 광의의 임금가산이라고 한다면,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가산제'를 도입하여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 장치 마련

: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 등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

중소기업의 정규직 고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

- 제도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상승은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 강화

소득주도 성장과 임금인상 방안 - 최저임금

II.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확대

□ 최저임금 법률 명시를 통한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명확화, 객관화해야 함
시간제 근로자(203만명)에 대해 최저임금 가산률을 적용하여 시간제 근로자 임금수준을 상향 보정하는 방안 검토

- 비정규직의 시간외 수당 가산률(현행 0.5%→1%)도 상향 조정

생활임금제(공공부문 최저임금)를 전면적으로 도입·확산하여 저임금 빈곤해소, 임금격차 해소 위한 사회정책 수단

-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적용기업 확대를 견인해 내고 생계보장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현실화와 같은 정책적 파급효과 유도
영세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

-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금 보전과 함께 4대 보험 지원 확대 및 한시적 세제혜택
방안 마련

- 가칭 「**최저임금현실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회복·상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유도하는 제도 및 세제지원 강화방안 마련

소득주도 성장과 임금인상 방안 - 한계기업/자영업

Ⅲ. 한계기업 및 한계자영업 지원 강화

-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비용 부담 발생
- 비용상승이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보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 필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보조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확대
정규직고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지원금 확대
임금 보전, 4대보험 지원 확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로 흡수

인건비 부담증가로 인한 경영악화 방지

소득주도 성장 -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

Ⅳ.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 도입

- 고용기회의 확대는 가계소득의 제고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 활성화에 기여
 - 지속적인 고용유지나 신규 고용창출 등 안정적 고용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를 통해 정부 R&D 투자지원 확대, 정부발주 사업 참여자격과 인센티브 제공
 -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에 생활임금 적용기업도 포함하여 지원 강화
 -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

소득주도 성장 - 가계지출비 절감

V. 가계지출비용 감소

- 정부의 꿈수증세는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켜 내수경기의 악순환을 반복시킬 우려 존재
- 생활비 절감은 실질적으로 가계에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

- 제2금융권 대출, 카드론 등 기준금리에 연동한 금리 인하 및 보험약관대출 금리인하
-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도록 강제
- 단말기 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
- 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고운맘카드) 확대
- 도서구입비, 학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

I

경쟁촉진형 시장구조

II

창업국가

III

미래 성장산업 육성

기업가정신 융성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경쟁촉진

비즈니스 생태계 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상생경제

창업
활성화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창업국가

미래산업
(MESIA)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을 스마트화하여

첨단 고부가치 산업육성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

시장생태계 전환을 위한 신산업전략

경쟁 촉진

대기업 반칙 불용 // 대기업은 세계로

대기업 - 중소기업 상호협력체계 강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 강화, 공유 경제 도입

중소기업의 해외직판 지원 ⇒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창업 국가

창업보험, 창업초기 자금지원: 자금회수의 불확실성 제거 ⇒ 엔젤투자 활성화 기대

연대보증제도 폐지: 창업가 정신을 저해 ⇒ 재창업 기회 확대, 창업가 정신 활성화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업화 관리

미래 산업

미래성장동력: MESIA 산업(Medical, Energy, Safety, Intelligence, Aerospace)
/ KAIST,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산업

미래 성장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

I. 경쟁촉진형 시장구조

1. 혁신경제 활성화 방향

□ 기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며 혁신경제는 필수적인 요소

- 대기업을 중심 수출 주력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
 - **혁신경제를 통한 역동적 성장정책이 필요함**
- 역동적인 성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갖고
 - 두려움이 없이 창업 등을 통하여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달성가능한 성장을 의미함
 - 미래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블루오션 모색: 벤처창업은 역동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2. 혁신경제 활성화 정책

□ 공정한 시장경제

- 기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재점검을 통하여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
- 통신·맥주·자동차 대체 부품 등 '경쟁촉진 3법'처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시장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 실질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발굴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

II. 창업국가

□ 벤처창업 활성화

○ 창업보험 도입

- 초기 창업보험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시행
- 가입 보험료에 따라 보장금액을 산정
- 보장금액을 벗어난 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재창업 및 기업회생을 통해 장기적으로 회수
- 창업보험이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제거: 엔젤투자 활성화를 기대

○ 연대보증제도 폐지

- 정부에서 도입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혜택은
연대보증 필요치 않은 우수기업들이 주로 받아 실효성이 떨어짐
실제 혜택이 필요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홍종학 의원이 법안을 발의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

Ⅲ. 미래 성장산업 육성

-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 **MESIA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MESIA 세부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선순위 선정

미래성장동력: MESIA 산업(Medical, Energy, Safety, Intelligence, Areospace)

Medical 산업(BT&NT): 생명공학(바이오, 의료, 농업, Robotics 등)

Energy (ET: 그린Car, Battery, 신재생, Plant)

Safety (국방, 교통, 안전): Robotics

Intelligence (IT: 소프트웨어, 금융(핀테크), CT: 교육, 문화예술(한류)

Aerospace (ST: 항공우주)

- 미래 성장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 미래 성장산업 발굴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소결

- :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산업전략은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와 체질 개혁
-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창조경제 + 서비스산업 활성화 +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는 차별됨
- : 신산업전략위원회 구성

일자리 복지

I

조세정의 실현

II

부의 양극화 방지와 중산층 지원을 위한 증세

III

복지재원 마련

IV

일자리 창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

조세정의 실현

- 선 부자 증세, 후 보편 증세
법인세 정상화와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축소
초고소득자의 탈세방지 및 철저한 과세

중산층 지원을 위한 증세

- 부의 쏠림 방지-중산층 지원 위한 과세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창업인력 지원
최상위 계층에 집중된 금융소득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일자리 복지실현

중복지 중부담; 복지자원 마련

- 사회복지세 도입
기존의 직접세에 10% 또는 20%의 세율을 추가 적용
단, 국민적 대타협을 전제로 도입 가능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평생교육
- 노인적합형 일자리, 여성노동력 적극적 활용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복지

중부담·중복지 복지국가와 그 방향

왜 지금 '중부담·중복지' 복지국가인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증세 있는 복지로 증세논의를 위한 국가 상(像)과 '제3의 길' 제시

- 단순히 부담수준을 높이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최대고용을 통해 성장을 보완하는 중부담·중복지 복지국가가 요구됨

'중부담·중복지'는 어떤 복지국가인가?

-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자로 참여하고
- 필요한 만큼 혜택을 누리는 최대고용형 복지국가
- 사람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친화형 복지국가
-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사회적 연대로 대처하는 복지국가

중복지의 방향

- 사전예방적 차원의 이른바 사회적 공통자산은 보편복지로
- 사후적 차원에서 구제가 필요한 영역은 선별적 복지로 유연화
-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영역은 광범위한 인구를 포괄하는 보편주의로 설계
- 사후적·구제적 차원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영역은 대상자들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는 선별주의로 설계

일자리 복지

중부담·중복지: 조세와 복지 대타협

중부담의 방향

대부분의 국민이 증세에 저항하는 이유는 세금이 '불공평'한 부과
조세문제의 초점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임

- 진정한 중부담·중복지 국가의 시작은 **'증세'가 아닌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세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자본소득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 목적세 등을 포함한 증세문제를 논의

세부적 증세방안: 조세정의와 형평을 고려한 과세

-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재원확보
-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방지 및 철저한 과세
- 임대차등록세의 전국적 시행을 통한 과세기반 확보 및 임대차 현황 파악
-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중소기업과 창업인력 지원
- 금융소득 과세
- 주식양도차익 과세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세의 도입 검토(단, 국민적 대타협을 전제로 도입)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가동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선별·보편복지의 재조정은 사회의 안심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인프라서비스(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는 보편복지, 그 외는 니즈맞춤형서비스로 구별하여 유연하게 대응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정부지원규모를 현실화 하여 **‘괜찮은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 개선
- 영양관련 서비스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영양반장제도 도입
-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에서 해결까지 담당하는 복지코디네이터
- 지역내 노인 고독사, 가정 폭력 등 가정내 문제를 찾아가서 발굴하는 위기관리사

평생교육을 통한 이모작 일자리 제공

- 이모작 일자리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확립
- 고령자의 이모작을 지원하는 사회기여형, 소득유지형, 사회적응형 평생교육 실현

노인적합형 일자리, 여성노동력 적극적 활용

- 고령인구와 여성인력이 보다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권장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극복
- 고령자 취업확대를 위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노인일자리와 청년일자리는 보완관계)
- 여성노동력 활용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마련(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은 부적관계가 아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근로와 퇴직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 근로시간 단축에서 오는 소득감소 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어떤 국가를 지향하는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복지국가를!!

**신산업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
일자리 복지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